

“수해 조사결과, 주민 분노만 키웠다”

최영일 도의회 부의장 발의 ‘땀관리당국 규탄 결의안’ 본회의서 만장일치 채택

전북도의회 최영일 부의장이 발의한 땀 관리 수해 원인 조사용역 보완 촉구 규탄 결의안이 28일 전북도의회 제 383회 임시회 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8일 열린 땀 관리 수해 피해 원인조사 용역결과 보고회에서 밝혀진 최종 용역결과물의 부실성을 성토하고,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영일 부의장은 결의안 제안설명에서 “지난해 수해발생으로 삶의 터를



빼앗긴 피해주민들은 이번 조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국가의 실질적 피해보상을 기대하며 지난 1년을 기다려왔다”면서 “하지만 기다림의 끝은 또 다른 분노와 실망뿐이었다”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강하게 성토했다.

최 부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당시 조 명래 환경부장관은 한 점 의혹 없는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피해주민들도 환경부장관의 약속을 믿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사결과를 기다려온 것이다.

하지만 피해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조사용역 결과에는 사전 방류 미조치와 땀수위를 높게 유지하는 등 땀관리당국의 과실이 분명하게 포함되지 않았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게 제시돼 환경부장관의 약속은 공허한 말잔치로 끝나고 말았다.

이에 최영일 부의장은 “약 8억원이

라는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말잔치 조사용역이 전북도의회 자체조사결과 등 이미 제기된 문제점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피해주민들이 고대해오던 핵심 내용에서는 다 비껴가 있다”고 꼬집으면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땀관리당국이 애초부터 면피를 하기 위해 불타기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의심되고, 이제라도 용역결과를 보완해서 피해주민에 대한 국가차원의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국무총리실과 환경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등 관계 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대책 마련을”

나기학 도의원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군산, 제1선거구)의원은 2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여구역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개발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가 뒤따라 지역발전 정책을 감수하며 희생해왔고, 지금 현재도 희생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해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군산시 옥구읍 옥서면, 소룡동, 미성동, 나운동, 나운동, 신평동, 해신동, 1읍·1면·6동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해 공여한 지역에 해당한다.

나 의원은 “군산시 옥서면은 미군기지 바로 앞 지역으로, 비행장부대까지와 햄버거 등 식도락 여행지로 알려져, 이곳을 찾는 관광객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수준이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것이 멈춘 현재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고 일천 대낮된 격으로 미군기지의 정문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 정문을 폐쇄한 뒤 미군기지 장병들과 군무원, 군산시민조차도 발걸음을 하지 않아 군산 속의 외딴섬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여구역주변지역인 탓에 개발행위 규제로 ‘지역발전’ 시제는 50년 전 그때 멈춰버려 주민들은 공여구역주변지역을 잃어버린 시간 50년”이라 한다”며 “주민들은 오직 ‘지역발전’ 시제타임을 돌려길 바랄 뿐이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는 28일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선출직 공직자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도민들을 웃게 하는 힘, 청렴한 리더’

도의회, 의원·직원 대상 청렴교육… 반부패 법령 내용 특강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28일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신뢰받는 의회 정립을 위한 ‘선출직 공직자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도의회 송지용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박계욱 상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마련한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으로 진행됐다.

안영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비해충돌방지법’과 의원 행동강령 등 지방

의회 의원이 알아야 할 반부패 주요 법령 내용’에 대해 특강했다.

또 청렴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 문화예술프로그램도 선보였다.

아울러 청렴을 주제로 한 판소리와 서예 프로그램도 소개됐다.

의원들은 이날 청렴특강에 앞서 청렴서약식을 가졌다.

의원들은 ▲법과 원칙 준수와 청렴한 사회실현에 솔선수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한 공의 수호 ▲직위를 이용한 금품·향음의 수수 및

권한 남용, 이권개입과 알선청탁 금지 ▲공직 수행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하지 않을 것 등을 다짐했다.

송지용 의장은 “도의회는 지난 4월에도 한국투명성기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렴교육을 실시했다”며 “이번 교육도 청렴의식을 더욱 배양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추진됐다”고 말했다. 이어 “선출직 공직자를 위해 마련된 맞춤형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의 가치를 상기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도민께 더욱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진안 부귀-완주 소양 도로시설 개량 국도 건설 계획 반영을”

“진안 부귀-완주 소양 도로 시설 개량 공사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7일 전북사군의 회의장협의회(회장 전주지회 강동화 의장) 제285차 월례회에서다.

이날 회의는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진안 부귀-완주 소양 도로는 산악지역 특성상 급커브·경사 구간이 많아 매년 9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제성 논리에서 벗어나 안전 확보 차원에서 해당 구간 도로 개량 공사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회의는 “도로 위험도 점수가 전국 최상위권인 진안 부귀-완주 소양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4년간 꾸준히 도로 시설 개량 공사를 건의해 바 왔으나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통해 이용객들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전북 동부권 시군들의 접근성 개선에 이바지”고 역설했다.

“익산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설치해야”

최영규 도의원, “서남권 교육수요 충족 위해”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 중인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신규 설치사업’에 서남권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교통요지인 익산에 서남권 센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통안전관련 법제도는 이전보다 훨씬 강화됐지만, 아직까지도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법규 미준수로 인한 안타까운 교통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

해 인식개선을 통한 교육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직간접적 체험을 통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은 현재 지난 2009년 상주시, 2017년 경기 화성시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개소했다.

하지만 체험교육센터가 전국 단 2곳에 불과해 늘어나는 교육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연간 약 8만명 수준의 체험교육 수요가 발생하지만, 현상 유지 및 화성 체험교육센터에서 수용 가능한 교육인원은 연간 5만명 정도에 불과해 신규 설립이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역으로 볼 때 경기북부와 전북이 사업타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술했다.

최 의원은 “익산시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충남권 1시간, 경기·전남·경상권 2시간대에 위치한다”며 “고속철도, 호남고속도로가 지역 내 위치해 타지역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고, 특히 충남·전남과의 접근성 용이 및 교육수요 충족,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라는 측면에서 서남권 체험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필수조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영규 의원(익산 4)이 대표발의하고 김정수 의원(익산 2)이 공동발의한 ‘서남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전북 설립 촉구 건의안’은 28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이후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및 국회의장을 비롯한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박용근 도의원, “전북형 메타버스 정책 개발 조직개편 필요”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이 28일 “전북형 메타버스” 정책 개발을 위해 IT팀 신설 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교육, 문화·예술 등 분야를 막론하고 메타버스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 광풍이 불고 있다”며 “메타버스는 코로나19로 인해 망가진 일상에 대한 대안적 공간을 제공해 도민

들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연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인천사가 XR 메타버스 인천임을 프로젝트”를 수립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138억원을 배정받아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메타버스를 활용한 정책 개발이 급증하고 있다”며 “전북도도 메타버스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



책적 준비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의 과제와 각 시군이 참여한 대책 협의 IT팀 구성, 기존 정보화총괄과를 정보융합과로 개칭하는 등 조직개편 실행, 전북 대표 관광지에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 등을 제안했다.

/유호상 기자

최저임금 받고 가르치라구요?

오평근 도의원 5분 발언서 체육지도자 처우문제 제기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2)이 2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체육지도자의 열악한 처우문제를 지적했다.



대학 등 학교 운동부를 지도하는 전문체육지도자들은 확인된 것만 2017년 이후 인상을 이 제로로 동결상태에 묶

최근 5년간 인상을 9.2% 전문 지도자들 ‘동결’ 상태

생활체육지도자들 인상은 3.1%에 그쳐 법정 임금 ‘턱걸이’ 수준

“처우개선 없이 지도 전념 그 자체로 어불성설” 꼬집어 “전문지도자 등급 폐지 생체지도자는 내년부터 도비로 수당 지원해야”

오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 임금 인상은 지난 2017년 16.4%로 경종 뽐 이후 올해까지 연평균 9.2%가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다.

법적 임금 하한선을 높임으로써 전반적인 임금 상승효과를 유도하는 동시에 노동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공공분야 일자리의 체육 지도자들의 처우는 무풍지대였다.

대학 등 학교 운동부를 지도하는 전문체육지도자들은 확인된 것만 2017년 이후 인상을 이 제로로 동결상태에 묶여 있었고, 생활체육지도자도 연평균 3.1%의 인상을 보이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문체육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체육지도자가 지난 2017년 이후 동결된 임금 200만원, 실수령액으로는 185만원 가량을 받고 있고, 생활체육지도자는 206만5,000원, 실수령액으로는 184만4,260원을 받고 있다.

2021년 최저임금이 182만2,480원인 것을 감안하면, 법정 최저임금에서 턱걸이 하는 수준인 것이다.

오평근 의원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대우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체육지도에 전념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으면서 “전문체육지도자의 경우 인건비 수준을 결정하는 지도자별 등급 구분에서 제외된 C등급을 폐지함으로써 전반적인 임금상승 효과를 이끌어내고, 생활체육지도자는 전국에서 광역자치체의 수당액 지원이 없는 곳이 전북을 포함 한 3개 지자체인 것을 감안해 당장 내년부터 도비로 수당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표류하는 전북자치경찰 누구의 책임?’

문승우 도의원, “위원장 말, 의회 견제·감시권 부정”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군산4)이 28일 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에 나섰다.

문승우 위원장은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이 기대하고 원했던 자치경찰의 모습이 아니라, 이를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첫째, 업무보고에 참석한 자치경찰위원장이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자치사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며,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도의회의 견제·감시권을 부정했다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둘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협의해 만들어진 표준안을 기초해 도지사 발의로 의회에 접수됐고 의결된 ‘전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셋째, 자치경찰위원장은 사전 출석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본 회의장 출석을 거부하면서도, 정작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는 사전에 어떠한 협의와 양해 없이 업무보고를 사무국장이 요청했다고 일방적으로 발언을 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이 밖에도 자치경찰위원장의 막중한 권한과 책임에 비춰볼 때 최소한의 검증절차가 필요하며 인사청문제도 시행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문승우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와의 협의와 소통을 거부하는 자치경찰위원장의 말과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전북형 자치경찰 제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100% 국비 부담 촉구 등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원팀이 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전북도의회 제 383회 임시회에서 김희수(더불어민주당·전주6) 의원이 대정부 상대로 발의한 ‘어린이 돌봄 리과정 보육료 지원, 차별없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해당 건의안은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이 소외되지 않으며, 건강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지침을

개정 촉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3항에는 부모의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면서 보호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는 자식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신 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에 따라 시행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은 법과 따로국밥 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유호상 기자